

보도자료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신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애도와 기억의 장
일시	2022. 6. 23 (총 3쪽, 첨부자료 제외)
담당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70-5176-8160) 탈라 (다산인권센터 010-5608-0288)
제목	<코로나19, 추모와 기억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공적 추모와 애도, 국가는 없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코로나 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코로나19 시기 벌어진 인권 문제를 대응하는 인권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2.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를 비롯한 110인의 진정인(시민 102명, 8개 단체)는 2022. 6. 23. 10:30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코로나19, 추모와 기억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공적 추모와 애도, 국가는 없었다>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3. 기자회견은 아래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요지를 설명하고, 피해 당사자들의 발언 및 연대 발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발언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 진정 취지 :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사회적 재난으로서 코로나19와 국가의 책임 :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당사자 발언1 : 민지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 보호자모임)
 - 당사자 발언2 : 김누리(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 보호자모임)
 - 추모와 애도 국가 책임 촉구 발언 : 안형진 (홈리스 행동)

*기자회견 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4.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를 비롯한 110인의 진정인이 접수한 인권침해 진정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인들은 코로나19가 단순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재난을 넘어 그 미치는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참사임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다양한 사람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진정인들은 코로나19로 발생한 의료공백과 불충분한 공공의료로 인하여 사망한 시민들, 이주노동자, 홈리스, 장애인, 기저질환자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집단감염과 장시간 노동, 격무로 사망한 노동자, 시설 내 집단감염으로 사망한 장애인, 노인, 교정시설 수용자, 백신접종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들 등이 국가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지 못해 헌법 및 국제인권법에 따른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되었고,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진정인들은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당한 사람들, 그 가족들, 지인 등 피해자들은 ‘자유권규약’,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 등 국제인권법에 따라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생명권과 건강권의 침해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진정인들 역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진정인들은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절차의 마련이 예산, 정치 및 구조적 논쟁을 이유로 국가가 면제받을 수 없다는 유엔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의 추모절차에 관한 주제별 보고서를 근거로 코로나19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절차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 의무라는 점을 지적했다.

○진정인들은 2020. 9 실시되었던 선화장 후장례 지침이 코로나19 피해자들의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부당히 간섭하였다는 점, 추모를 위한 공적인 공간과 상징물, 공적인 추모행사 등 코로나19 피해자의 기억과 추모를 위한 행정적 조치가 없었다는 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사회적 참사에 관한 개별 법률에서 피해자들의 기억과 추모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코로나19 피해자들과 진정인들의 기억과 추모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진정인들은 국가인권위가 국회의장,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1)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에 관한 사업 시행 등 필요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과 2) 추모 및 예우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코로나19 희생자 추모 위원회를 설치·구성할 것을 권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진정인들은 추모절차를 수립·계획함에 있어 코로나19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수렴을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5.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발언문과 사진을 첨부합니다.**

***사진출처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로 표기 요청드립니다.**

발언1 - 진정 취지 :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인권위 진정취지로 대신합니다.



발언2 - 코로나19 사회적 재난과 국가의 책임 :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명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은 사회적 재난입니다.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는 생태계의 파괴, 전 지구적 환경파괴와 교류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개인의 자구노력으로만 피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바이러스 감염의 위협으로부터 피하거나 치료받거나 할 자원이 없는 사람들, 물리적 거리두기를 할 적절한 주거가 없거나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이 놓이지 않은 홈리스, 이주민, 장애인,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 정신병원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원 등 집단거주시설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희생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사회적 불평등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잃었기에 우리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합니다.

재난에서 국가는 헌법 34조 6항에 써있듯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재난안전기본법 2조에 명시되었듯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충분하게 단 한명도 뒤에 남기지않고 모든 목숨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병상의 확보, 평등한 백신 접종,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요했던 조치로서의 적절한 주거 지원과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체류허가, 장애인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 등의 돌봄 조치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용가능한 국가자원을 동원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니다. 오로지 전과차단에만 집중하며

자가격리기간을 줄이고 그에 따라 치료비 지원도 줄이면서 개인이 어마어마한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 치료비가 부담돼 중도에 치료를 중단한 사람들, 그 결과 생명과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유엔사회권위원회가 발표한 건강권 일반논평에서도 명시됐듯이, &치료받을 권리는 사고, 전염병 및 유사한 건강 위해 발생 시의 긴급 의료 시스템의 구축 및 긴급 상황 시의 재난 구호 및 인도적 지원의 제공을 포함&하며, 비차별적이고 평등해야 합니다. &건강자원의 부적절한 배분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차별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국가권력은 누구를 살릴 것인가에서 드러납니다. 생명권력, 어떤 생명을 살리고 어떤 사람을 방치할 것인가에서 통치성이 드러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게 묻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에서 과연 누구를 살게 하고 누구를 죽게 내버려두는 생명권력의 통치성을 발휘했습니까. 국가는 코로나19 기간동안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소수자들을 배제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생의 마지막을 나눌 수 없도록 했을 뿐 아니라 희생자들에 대한 가족들의 애도의 시간도 빼앗았습니다.

2020년 9월 제정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는 엄밀한 과학적 입증 없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의 장례절차를 <선 화장, 후장례>로 정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습니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는 연명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존엄하게 죽을 권리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과연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몰라서 그랬다고 불안으로 그냥 화장을 치르라고 명령한 것이 국가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가는 존중,보호, 실현의 3중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권위에 진정하는 내용에는 애도의 권리에 대한 침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공적인 애도의 장을 코로나 3년차인 지금까지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일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추모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애도의 장을, 함께 참여하는 공적의 애도의 시간을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할 권리를, 애도에 참여할수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심각했을 때는 질병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차마 코로나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주변에조차 말하지 못하며 제대로 된 위로조차 받지 못했던 희생자들의 가족은 충분한 애도의 시간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위로조차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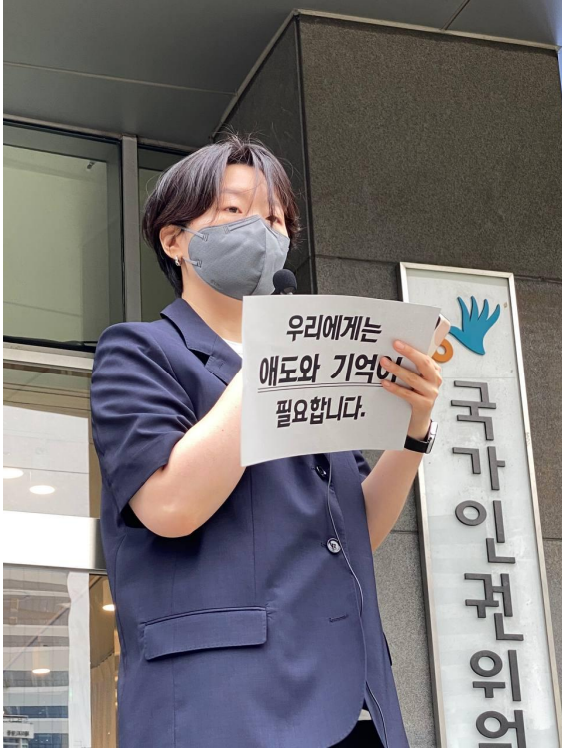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 피해자가이드 라인에 있는 배상의 권리 중 22문단 (g)항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만족을 위해 필요한 국가의 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에서 국가의 적극적 조치가 없어 희생된 사람들에게 공적인 기억과 추모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애도는 단지 희생자의 가족이나 친지에게만 국한된 권리가 아닙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입니다. 누구의 삶이 기억될만한 삶인가라는 삶의 지위나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애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원치않는 시공간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들을 기억함으로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새기는 것이 애도입니다. 또한 그 애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존엄한 존재임을 상기하는 자리입니다. 공적 애도는 사회적 재난에서 겪었던 수많은 불안과 공포 그리고 죽음에 대해 함께 기억하고 슬퍼하면서 망자와 산자를 연결하고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산자들이 연결되어있음을 느끼고 위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애도와 추모는 먼저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못다한 말들을,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못다한 말은 무엇일까. 그들이 만약 살아 돌아온다면 무엇인 잘못됐다고 말할까. 무엇이 그들의 삶을 빼앗았을까 등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애도입니다. 이렇게 애도와 추모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회, 더 존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진정을 계기로 정부는 이제라도 공적인 애도의 장을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 공공의료의 부족으로 의료공백으로 희생된 사람들, 코로나19의 치열한 현장에서 과로사로, 돌봄부담으로 세상을 떠난 모든 이, 코로나19 사망자 통계에도 잡히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발언3 - 민지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 보호자모임)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로나19 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족 민지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에 대해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요즘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지난 2년간의 시간 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된 것에 모두 기뻐합니다. 술자리를 2차, 3차까지 갈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고,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고,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음에 기뻐합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만 되어도 호들갑을 떨며 서로 간의 안전을 걱정하던 것은 이제 추억이 되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6월 22일 기준 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8,992명입니다. 작년 6월이었다면 까무러칠 숫자인데, 이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모두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두 달 전인 4월에만 6,564명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셨는데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4개월 넘는 시간 동안 에크모를 달고 중환자실에서 고군분투하시다가 지난 4월 29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49재였습니다. 요즘은 주로 장례를 치르게 되면 49재를 보내고 탈상을 한다고 합니다. 탈상을 할 때까지는 애도의 기간입니다. 유족들은 그 시간 동안 떠난 이를 그리워하고, 아파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인원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릴지 말지 뉴스가 떠들썩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확진자 숫자나 사망자 숫자

조차도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모든 시간을 빠르게 잊고 지우고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코로나19 유족들의 자리는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망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코로나 사망자 숫자에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격리해제가 된 지 한참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사망진단서에 코로나19라는 단어가 쓰여있음에도 코로나 사망자로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처럼 격리해제가 됐다는 이유로 코로나 사망자로 신고되지 않은 분들까지 더한다면, 지난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이었던 4월의 사망자 수는 실제 집계된 6,564명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 역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과소 집계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22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의 수는 공식 집계로만 24,474명입니다. 돌아가신 분들 모두 누군가의 친구이자,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24,474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생각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일 떠난 이를 그리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누군가들을 생각해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코로나19로 인해 누군가를 잃은 사람을 알고 계시나요? 혹은 코로나19로 인해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직접 알던 사이는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건너건너 누군가의 가족이, 혹은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을 떠나는 동안, 잠시라도 이들을 추모하거나 이들을 잃은 유족들을 기꺼이 안타까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우리는 추모하고 애도할 시간을 가지지 않고, 무엇을 잊기 위해, 무엇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이토록 빠르게 망각하려 하는지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왜 유족들은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내 친구와 내 가족의 죽음이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조용히 남겨져야 하는 것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들 중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설 안에서, 요양원에서 집단 감염되어, 혹은 병상과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급차 안에서, 응급실에서, 길에서, 혹은 의료행위인지조차 알 수 없는 재택 치료라는 이름의 재택 방치로 집 안에서. 죽음을 눈 앞에서 목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 죽음입니까?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사망한 희생자들이 원래 이 사회에 없었던 것처럼 고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유족들이 격리와 통제 위주의 행정 그리고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묻고 따지기도 전에, 이런 일이 마치 아예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집에서 격리되어 있다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제가 직접 부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 가셨습니다. 그 바람에 50년을 함께 살았던 짝궁의 마지막 목소리조차 제대로 듣지 못한채 아내를 떠나보낸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아침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질문을 반복하십니다. 멀쩡하던 엄마가

왜 죽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재택 치료라고 하더니 왜 사람을 치료하지 않아서 사람을 그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19가 끝났다고 한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저는 모르겠다고 답합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질문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남았습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었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개선해야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남은 유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위중증 피해 생존자들은 수많은 후유증을 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사회는 이 수많은 죽음을 어떻게 추모하고 애도할 것입니까?

저는 국가에 묻고 싶은 것이 아주 많습니다. 이전 정부도, 현 정부도 우리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칭찬하던 K방역의 트로피만을 남긴 채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들을 위해, 그리고 남은 유족들을 위해 이제는 국가가 우리의 질문을 듣고, 답할 차례입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참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이제 답을 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발언4. - 김누리(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 보호자모임)



오늘 저는 2022년 3월 17일 먼저 보내드려야만 했던 엄마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작년 정부의 위드코로나 발표 이후 코로나 감염이 된 어머니는 아픈 걸 너무 잘 참는 분이기엔 진행이 많이 된 상태로 응급실을 향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폐렴 진단을 내렸음에도 아침에 코로나 검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란 말을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당연히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무수히 나오는 상황이라 그저 집에서 병상배정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약이 없이 재택치료키트에 나온 감기약만 가지고서 몇 일을 기다리다 겨우 병상 배정을 받아 입원하였지만 이틀 뒤 바로 중환자실로 가셨습니다. 그래도 이때는 건강해져서 나오겠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0일 격리해제가 된 뒤 있는 병원에서 다행히 쫓겨나진 않았지만, 상급병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치료는 여기까지라는 말을 듣고 갖은 방법을 통해 겨우 전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일어나서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이라는 말을 하실 때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나 잘 버텨주던 엄마는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엄마는 중환자실로 가시기 전 잠깐의 통화 문자가 끝일 줄 알았더라면 더 많이 나눴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코로나 확진 일주일 전 얼굴을 마주 보며 식사를 했는데 이제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지난 3월 7일 [코로나 19 위중증 피해 환자 보호자 모임] 기자회견 당시 정부는 마치 위중증 환자들 모두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는 듯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기저 질환자도 아니었습니다.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아님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 건강이 악화하여 위중증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저 전파력이 사라지는 시점을 완치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들이 과연 전파력이 사라졌다고 다 나온 걸까요? 정부는 그저 방역에만 힘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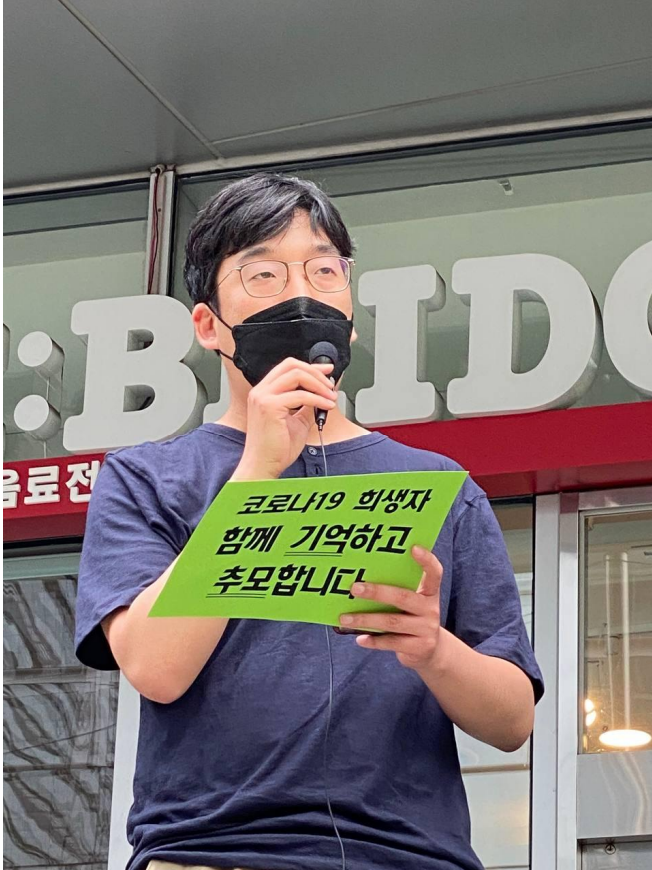
있었습니다. 치료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지만, 그저 전파를 막으려는 격리, 또는 7일, 20일이라는 기간만의 치료만을 책임지고 그 이후에는 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방역에만 힘쓰던 정부는 위드코로나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올 것을 예상 못한 걸까요? 2020년 10월 13일 감염 예방법 개정한 이유도 확진자가 많아질 걸 예상했기에 그렇게 “증상 및 감염력이 소실된 시점까지”에서 증상을 지워 버렸던 거 아닌가요? 위드코로나 발표 이전에 위중증에 대한 대비만 잘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가족이 병상을 기다리다가 악화하여 세상을 떠나는 일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입원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는 가동 병상 숫자를 볼 수 있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엄마처럼 기다리다가 더 나빠지는 사람들은 없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상은 마련되어 있으나 그 병상을 감당할 의료진이 없어 가동하지 못하여 병원을 가지 못해 죽는 이들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이기식 숫자놀이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2만 5천여 명이 코로나 사망자의 전부일까요? 저희 엄마는 코로나 사망자가 아닙니다. 사망진단엔 그저 폐렴만 적혀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폐렴을 얻었는데, 그냥 폐렴이랍니다. 전파력이 없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요. 저희 엄마와 같은 분들이 생각보다 무수히 많습니다. 2022년 3월 인구 동향에서 사망자 수는 44,487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7.6%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화장장, 장례식장이 포화가 되어 그저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일들을 유가족들은 겪었습니다. 재난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들 말합니다. 저희 엄마도 장례식장도 화장장도 잡지 못하다 장례식장 측과 상의해 이틀 안치하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화장장은 이른 아침에도 가득 찼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은 사망자가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 엄마와 같은 분들은 그냥 사망자로 남아 이대로 잊혀져야 하는게 맞는 걸까요?

저는 솔직히 너무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정권 때마다 큰 감염병들이 나왔었습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까지. 앞으로 또 다른 감염병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제대로 된 대비책을 마련해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희 엄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발언5. - 안형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2020년 12월, 당시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시점에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발주한 용역 보고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라는 이름의 보고서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노숙인) 지정병원을 찾았던 홈리스 환자가 결국 진료를 받지 못하고 심정지로 사망했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만, 저는 그리 놀랍지 않았습니다. 보고서가 발간된 시점 즈음,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울역 광장에서 한 거리홈리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현장에 제가 있었고 직접 119 신고도 했었죠. 구급대원들은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환자가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대신 그 홈리스 환자가 간 곳은 인근의 노숙인시설이었습니다.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노숙인 등'은 국가가 지정한 소수의 국공립병원만을 이용할 수 있는데, 코로나 시기 대대수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홈리스가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만들고 운용하는 차별적인 법령과 제도가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음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동안, 차별적인 제도 때문에 특정 사회 집단에 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죽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도 해보려 합니다. 홈리스를 비롯한 기난한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되면, 많은 경우 무연고사망자가 되고 공영장례의 대상이 됩니다. 지자체 조례

에 근거한 공영장례는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사망한 무연고자들은 공영장례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건강권, 생명권뿐만 아니라 애도의 권리 또한 보장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국가의 책무 방기에서 비롯된 이 모든 문제들이, 여전히 결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지금의 현실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결산의 책임, 국가에 있음은 명약관화합니다. 코로나 시기 동안, 많은 이들이 생명권과 건강권, 나아가 추모와 애도와 기억의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박탈당한 보편적인 권리는 공적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있는 조치를 우리는 요구합니다.





